

밝고 밝은 해와 달이

이인영(李麟榮 1867-1909)

分明日月懸中州
四海風潮濫○流
蚌鷸緣河相持久
西洲應無漁人收

밝고 밝은 해와 달이 중주에 떠 있는데

온 누리에 새 물결은 넘쳐 흐르는구나

조개와 황새는 어찌해 버티고만 있는가

서양에서 온 어부 다 쓸어갈 것 어이하리

해설 : 초기의 을미거사 때 유인석, 이강년 장군 등과 함께 거사를 일으켰다가 정미거사 때 다시 참가했다. 13도 의병대장으로 초대되어 일거에 한양까지 진격하려하였으나 중도에서 부친의 부음을 듣고 고향으로 내려와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어 서울 감옥에서 순국 사형당했다.

이 시는 이인영 장군의 옥중 시로, 동양과 서양 제국의 침탈에 직면한 한말의 정서가 잘 드러나있다. 서로 싸우기만 하다가는 서양 제국주의자들에게 어부지리를 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시로 나타낸 것이다. 100년 후 오늘,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둘러싸여있는 오늘 한국의 현실을 예언해놓은 것 같아 읽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출전 _ 騎鶴隨筆

2011 3*4

통권 56호

독립정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첫 기관지 「독립」의 자주 독립정신과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 받고자 합니다.



04

04

권두언 _

강점 1백년 청산도 없이

‘한·미·일’ 공조는 무슨 소리냐

| 김자동



06

06

독립운동 1 _

신흥무관학교 100년의 의미와 과제

| 황원섭

16

독립운동 2 _

3·1운동 이후 한국의 사조는 왜 좌경했나?

| 신복룡



22

22

특별기획 1 _

한·일 군사동맹의 반민족성

| 김삼웅

28

특별기획 2 _

한·일 군사협력 강화의 배경 및
문제점과 대안전략

| 홍현익



발행인 | 김자동
편집인 | 김학민
편집위원 | 이두엽, 신명식, 신준수, 김지용, 이재승, 이일선, 김봉현, 류동연
편집 · 디자인 | 동방기획

우 100-101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76-3 오양수산 B/D 305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TEL : (02)3210-0411 | FAX : (02)732-2870 | E-mail : kpg1919@korea.com
홈페이지 : www.kopogo.com

34 특별기획 3 _
북한의 4차 미사일 실험하면 한·미·일
집단방위체제 가시화된다!

| 김종대



40 다시 보는 좋은 기사
조봉암 묘비에 무엇을 새길 것인가?

| 양권모



43 독립정신 이모저모



45 임정서가 _
조봉암과 진보당

| 정태영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안살림꾼 - 정정화

| 신명식

우리 국토를 넘보는 일본과 동맹을 맺겠다는 것인가?



김 자 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본지 지난 호(1, 2월)에서 ‘한·미·일’ 공조에 관하여 논의를 끝맺으면서 “금년에는 실속 없는 ‘한·미·일’ 공조가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서술했다.

그런데 이 글이 나가기 바쁘게 금년에는 한·일이 ‘공조’를 넘어 이제 두 나라가 군사동맹을 향한 첫 발을 내딛었다.

김관진 한국 국방장관과 일본의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성장관은 지난 1월 10일부터 2일간 서울에서 회담을 가졌다.

여기서 양국이 상호군수지원 협정과 군사정보보호 협정의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신문들은 보도했다. 이 두 협정은 사실상 준 군사동맹을 뜻하는 것으로 기존 한·미 및 일·미 동맹과 더

불어 동북아·북태평양에 걸친 3각동맹의 탄생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북한 및 중국의 입장에서 이것은 그들을 봉쇄·압박하는 수단으로 볼 것은 당연하다. 이런 협정이 성립되기도 전에 이미 한·미 군사훈련에 일본의 옹저버가 참석하고 있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거의 우파가 독점하고 있는 일본의 주요 언론기관들은 이런 사태의 진전에 들떠있다. 그리고 일본의 최대 보수일간지의 하나인〈요미우리신문〉은 ‘안보협력의 질을 착실히 높이자.’는 사실로 두 나라의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을 주문했다. 간 나오토 일본총리는 이에 앞서 지난 12월 13일 필요할 경우 자위대가 남북한에서 활동할 가능성을 거론한바 있다. 간나오토의 민주당 정부가 출범했을 때 일본의 외교정책이 보다 평화 지향적으로 나가기를 기대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난 일본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변한 것이 없이 꾸준히 군국주의의 부활을 지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의 이런 적극적 태도에 반하여 김관진 국방장관은 “여론도 고려해야하는 만큼 로키(낮은 자세)로 전진시키자.”고 말했다 한다. 국방부 측에서도 ‘국민정서’와 언론을 고려하여 ‘한·일 군사협력을 낮은 단계에서 차근차근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다. 특히 국방부 관계자는 ‘국민에게 숨기고자 하는 게 아님’을 강조했다. 만약 한·일 군사동맹화가 민족정의와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 옳은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진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묻고 싶다. 결국은 떳떳하지 못한 일을 어물쩍 넘기겠다는 속셈을 갖고 있다고 보이는 것이다.

일본은 우리 강토를 강점하는 동안 우리겨레 약 7백만 명(당시 우리 총인구의 약1/4)을 군인, 군속, 정신대(위안부를 포함) 및 노무자로 일본, 조선 및 일본 점령하의 지역으로 강제 동원했었다. 일본은 여기에 대한 신원파악과 보상은커녕 정확한 숫자 파악에도 협력을 하지않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통하여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 동원된 노무자가 3만 명에 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은 그동안 알려졌던 것의 2배의 규모이다. 그런데 일본은 북한이 일본인 십여 명을 납치했다고 크게 문제를 삼고 있다. 일본은 또한 우리 국토의 일부를 자국의 영토라고 억지를 쓰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전향적 태도변화’가 없는 한 대화도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는 근본적 태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도 동맹까지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나라의 우파들은 국가의 ‘정체성’을 독점적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있다. 얼마 전 한때 서울대 총장까지 지낸 지식인 출신의 총리까지도 어느 변호사가 천안함 침몰과정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자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말한 일이 있다. 자기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정녕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우리 국토의 일부를 넘보는 ‘적’과 동맹관계를 맺자고 하는 사람의 국적이 정녕 대한민국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㉞

신흥무관학교 100년의 의미와 과제

황원섭

우당이회영선생기념사업회 상임이사

1. 신흥무관학교 설립의 역사적 의미

신흥무관학교가 설립된 것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한 경술국치 다음해인 1911년으로 꼭 100년 전의 일이다. 중국 길림성 삼원보 추가가에 신흥강습소라는 명칭으로 개교하지만 군사훈련을 시키는 군관 학교의 성격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다.

신흥무관학교 설립에 대한 논의는 신민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서울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조직된 신민회 간부들이 만주에 강력한 항일운동 기지를 건설하자는 의견에 따라 추진 된 것이다. 1907년 상동파들이 고종황제께 주청하여 성사된 헤이그밀사가 기대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하자, 조국광복의 방법론으로 외교투쟁보다는 무장투쟁노선을 선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민회에서는 1910년 7월 이회영이 이동녕, 장유순, 이관직 등과 함께 무장 투쟁 기지 건설을 위하여 만주지역을 답사하게 된다. 이회영은 돌아오자마자 바로 6형제 회의에서 “일제 치하에서는 잠시도 살 수 없다.”는 결의에 따라 엄청난 재산을 정리하여 명문거족 6형제, 가족 등 60여명이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망명하였다. 생면부지의 이민족이 살고 있고, 갖가지 풍토병이 기다리는, 그리고 “왜놈 못지않게 매섭다.”는 혹독한 추위가 엄습하는 서간도로 간 것이다.

안동의 혁신 유림 이상룡 형제 대소가, 김대락 대소가, 김동삼 형제 일가, 황호 일가도 “뜻을

이루지 못하면 살아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압록강을 건넜다. 의병장으로 처형 당한 선산의 허위 대소가도 떠났고, 이동녕·이장녕 형제, 윤기섭, 여준, 김창환, 이관직 등 서울의 지사, 무관들도 합류하였다.

이들은 서간도에서 독립운동의 기반을 닦기 위해 경학사를 조직하고 독립군을 이끌 간부와 중견인물들을 양성하기 위해 신흥무관학교를 세웠다. 평안도, 충청도 등 전국 각지에서 기개 있는 뛰어난 인재들이 몰려들었다. 신흥(新興)의 ‘新’자는 신민회의 ‘新’자를 씀으로써 신민회의 정신과 이념을 계승한 것이다

당시 조정에서는 친일파와 대부분의 고관대작들이 경술국치로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전국의 뜻있는 지사들은 잃어버린 국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분연히 쫓기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것이다.

신흥무관학교의 설립은 우리 민족의 기상과 혈맥이 신흥무관학교를 통하여 다시 살아나 우리의 유구한 역사가 결코 중단 되지 않고 명맥을 이었다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단지 그 동안 남북한 대결구조 속에서 무장투쟁노선이 의식적으로 소외되었고, 북한 정권의 법통을 김일성의 빨치산 투쟁에서 시작한 무장투쟁에 둬 따라, 우리는 그 동안 무장투쟁에 대한 연구를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의 독립운동사 연구가 임시정부 활동에 치우치고, 무장투쟁노선은 상대적으로 경시하여 균형 잡힌 연구를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와 무장투쟁을 재조명하기 시작하여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금년에 신흥무관학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통하여, 경술국치 이후 3·1만세 운동까지 소홀히 했던 독립운동사와 무장투쟁을 다시 정리해야 될 것이다.

2. 독립운동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일본의 강압적인 무단통치로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은 거의 불가능하여 이때부터 3·1운동 이전까지 1910년대가 우리 민족사에 가장 암울했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일제가 무단통치를 자행하여 국내와는 거의 절연되어 있었고 어떤 외부적 지원도 받기가 어려웠던 때였다. 이 때문에 3·1운동 이후 일제가 패망 할 때 까지 활발히 전개되었던 독립운동과 달리 1910년대에는 주목할 만한 독립운동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도 신흥무관학교가 개교하여 10년 동안 한시도 쉬지 않고 무관 양성에 진력했던 사실은 우리 역사에서 소중한 위상을 차지한다.

일제의 강권통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기상과 저력을 발휘하여 민족의 자주정신과 역사를 중단 없이 이어간 것이 신흥무관학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 신흥무관학교 학생들이 둔전제에 따라 농사짓는 모습

신흥무관학교에서는 10년 동안 3,500여명의 독립군 간부를 배출하여 이들이 독립군과 광복군의 중심이 되었고, 의혈투쟁의 주축으로 무장독립투쟁의 중추세력이 되었다.

1920년대에 전 세계 독립전쟁사에서 청산리전투와 같은 큰 규모의 전쟁은 찾아보기 힘

들다. 일반적으로 청산리전투는 대한군정서-북로군정서가 주축이된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그 구성원들이 신흥무관학교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 1919년 대한군정서가 만들어 질 때 신흥무관학교 교관 이장녕은 참모장으로 초빙되었다. 또 신흥무관학교 교관인 이범석과 생도인 박영희, 김훈, 백종렬, 강화린, 오상세, 이운강은 각각 사관 연성소 연성대장, 사관연성소 학도단장, 중군장교, 제2학도대 제3구대장, 제1중대장서리, 제4중대장, 소대장서리 등을 맡아 일본군과 싸웠고, 생도인 최해, 신형섭 등 적지 않은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청산리 전투에서 일역을 맡았다. 뿐만 아니라, 이청천이 이끈 신흥무관학교 생도와 군인으로 구성된 교성대는 청산리전투의 또 한 다른 주역인 흥범도부대의 지원을 받아 이 전쟁에 참여했다.

무장독립투쟁사에서 신흥무관학교 생도와 관련자들의 활동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서로군정서 의용대는 말할 나위도 없고, 통군부, 통의부, 정의부 및 참의부에도 다수가 참여했고, 조선혁명군, 대한독립군, 고려혁명군 등 여러 독립군 단체에서 활동했다.

특히 1940년 9월 17일에 대한민국임시정부 소속 군으로 광복군이 조직되었을 때 이청천이 총사령관, 이범석이 참모장과 제2지대장, 신흥무관학교 생도였던 김학규는 제3지대장을 맡은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김원봉은 임시정부에서 국무위원과 군무부장(국방장관)을 맡았고 조선의용대원으로 구성된 광복군 제1지대를 통할 지휘 했다.

신흥무관학교 출신이 무장투쟁 뿐 아니라 독립운동과정에서 남긴 발자취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1919년 2월경에 발표된 대한독립선언서 민족대표 39인 가운데 김동삼, 여준, 이동녕, 이상룡, 이회영, 이시영, 이택, 허혁 등 신흥무관학교 관련자들이 8명이나 된다는 데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상룡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대통령제에서 국무령제로 바뀔 때 초대 국무령으로 추대되었다. 이회영은 헤이그밀사 사건에도 관여했지만, 3·1운동 직전 고종 망명을 기획했고, 아나키스트운동의 원로로 폭탄투척에 의한 철저한 항일투쟁과 상부상조에 의한 인류사회 건설에 매

진했다. 이동녕은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조직되었을 때 초대 의장이었고, 그 뒤 임시정부 국무총리와 국무령, 주석, 국무위원을 역임하면서 서거할 때까지 임시정부를 이끌었다. 이시영 또한 임시정부의 법무총장 재무총장과 국무위원을 역임한 임시정부의 증인이다. 김동삼은 1923년에 독립운동의 대방침을 정하고 독립운동 기구를 개편하기 위해 열린 국민대표회의 의장이었으며(부의장 안창호, 윤해), 통의부 중앙집행 위원장, 정의부 참모장, 만주지역 민족유일당촉진회 위원장으로 활약했다. 윤기섭은 민족혁명당 중앙집행위원이었다. 김원봉은 의열단 단장으로 1920년대에 많은 활동을 하였으며, 1930·40년대에는 민족혁명당을 이끌었고, 임시정부 국무위원과 군무부장을 역임했다. 1919년 11월 길림성에서 의열단이 조직되었을 때 창립자 13명 가운데 김원봉, 이종암 등 8명이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었다. 님 웨일즈의 「아리랑」의 주인공 김산으로 유명해진 장지락은 신흥무관학교 생도로 혁명운동에 일생을 바쳤다.

신흥무관학교 관련자들은 해방 후에도 비록 노령이지만 많은 활동을 했다. 이 중 정부에 참여한 인물들만 꼽아 보자. 이시영은 초대 부통령으로, 독립운동가답게 이승만 대통령의 독주를 비판하였고, 국민 방위군사건이 일어나자 항의의 표시로 사임했다. 윤기섭은 남조선 과도입법의 원 부의장을 지냈고(의장 김규식), 2대 국회의원이었다. 이청천은 초대 무임소장관과 제헌 국회의원, 2대 국회의원이었다. 이범석은 초대 국무총리이자 국방장관이었고, 자유당 창당 시 부당수였다. 신흥무관학교 초기 졸업생인 변영태는 1950년대에 외무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냈다.

3. 신흥무관학교와 국군의 정통성 문제

신흥무관학교는 대한제국 무관학교 출신 교관들을 통하여 그들의 의병투쟁과 구국이념 및 역사적인 전통성을 이어 받았다.

대한제국무관학교는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한 후 개혁정치의 일환으로 군제를 개혁하면서 1896년에 무관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사관학교이다. 그러나 일제의 노골적인 간섭으로 1904년까지 지속되었고, 군대는 1907년에 강제 해산하게 되었다.

군대가 해산되자 이들은 국내외에서 치열한 의병투쟁을 전개하며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싸웠다.

또한 이들은 신흥무관학교의 개교과정에 참여하여 교관으로서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였다. 신흥무관학교 교장이었던 이세영은 대한제국군 장교였고, 교관이었던 이장녕, 이관직, 김창환, 양성환은 무관학교 졸업생이었다. 3·1운동이후 가담한 신흥무관학교 1903년 무관 학교 속성과 출신이다.

신흥무관학교에 속성과와 본과를 둔 것도 대한제국무관학교를 이어 받은 것이며, 교과목도

전술학, 군제학, 병기학, 축성학, 지형학, 위생학, 외국어학 등 대부분이 대한제국무관학교를 이어 받았다. 이와 같이 신흥무관학교는 대한제국 말기 민족운동의 구심점이었던 신민회와 대한제국무관학교 및 항일전쟁을 벌였던 의병투쟁을 이어 받았던 것이다.

3·1운동 이후의 독립군 활동이 대부분 신흥무관학교 관련자들과 연계가 있음을 이미 지적하였다. 특히 대한민국임시정부 광복군의 주요 간부들은 신흥무관학교 관련자였음을 고려할 때 신흥무관학교의 역사와 전통성이 광복군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광복군 총사령관인 지청천, 참모장 겸 제2지대장 이범석, 제1지대장 김원봉, 제3지대장 김학규 등 지휘관이 모두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다.

광복군 출범식에서 조소앙 선생이 경과보고를 통하여 광복군의 창설일은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한 날이라고 표현한 것은 광복군이 대한제국 군대, 의병투쟁, 신흥무관학교, 독립군을 이어 받은 데서 그 연원을 찾고 있는 것이다. 광복군의 이념과 전통은 해방 이후 정부수립과정에서 대한민국 국군으로 계승되었다고 볼 수 있다. 광복군 출신 중 지휘관급은 대부분 퇴역하여 행정부, 입법부에 진출하여 대한민국 건국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당시 미군정에서 임시정부와 광복군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국방경비대나 군사영어학교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면서 국군의 책임자를 광복군 출신으로 우선 기용한 것은 우리 국군의 정통성을 독립군과 광복군의 전통과 이념에서 찾으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통위부장(현 국방부 장관) 유동렬, 정부 수립 후 초대 국방부장관 이범석, 국방차관 최용덕이 광복군 출신이다. 고위지휘관 중에 김홍일, 이준석, 채원개, 오광선, 안춘생 등이 광복군 출신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를 개교하면서 독립군 출신인 안춘생 장군을 교장으로 발탁한 배경은 우리 국군이 독립군과 광복군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확고한 신념과 철학이 깔려있는 것이다.

아직도 일부에서는 우리 국군의 연원을 남조선국방경비대나 군사영어학교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이들의 출신 성분이 학병출신 80%, 일본육사 10%, 만군 7%, 광복군 출신 3% 등으로 일본군 출신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광복군과 연계시킬 수 없다는 편협된 논리에서 기인한 것이다. 학도병은 일본군은 분명하지만 강제로 징집된 것이며, 육사출신도 일본에 충성하려는 것 보다는 현실에 적응하려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이 수적으로는 대다수이지만 이는 산술적인 통계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국군의 정신적 토대나 정통성은 우리 민족사에서 면면히 이어온 구국의 이념과 호국정신이라는 점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일본군 출신 소수 원로들이 자신들의 위상을 고려하여, 국군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는 억지논리이며, 자기 방어를 위한 이기적 주장에 불과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제국주의 국가 지배 하에서 독립한 모든 나라에서 새로 창설된 군대는 당연히 독립군(민족해방군)을 이어 받은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독립전쟁을 벌였던 인도네시아, 버마, 베트남, 중동지방, 북아프리카 지역 등 세계 어디에서나 자신의 역사적 정통성을 독립군 활동에서 찾는다. 인도나 필리핀, 남·북아메리카의 여러 나라, 심지어 카리브 연안의 섬나라들까지 독립운동 영웅에 대해 무한한 존경심을 가지고 그들을 기리고 있다.

하물며 한국처럼 일제가 국권을 침탈해서 패망할 때까지 한 시도 게을리 하지 않고 줄기차게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고, 독립군이 왕성히 활동한 나라에서는 이 점을 각별히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

4. 신흥무관학교가 장기간 존속한 요인

독립군을 양성하는 기관이나 학교는 여러 곳에 있었다. 이상설, 이승희 등은 경술국치 이전에 러시아와 중국 국경지대에 있는 흥개호 부근에 한홍동을 건설하고 한민학교를 세웠으며, 이동휘와 그의 동지들은 만주 왕청현 라자구에 비밀군사학교를 세웠다. 박용만 등 미주 동포들도 군사학교를 세워 미래의 독립군을 양성했다. 그러나 이들은 오래 가지 못하고 곧 문을 닫았다.



▲ 신민회

그러나 신흥무관학교는 1911년에 설립된 이후 10년 동안 존속하며 많은 인재들을 양성 하였다. 특히 3·1운동 직후에는 한반도와 중국 각지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 들어 유하현 고산자에 분교를 새로 크게 지어야 했고, 통화현 쾌대무자에도 분교를 세워, 합니하 무관학교와 함께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사교육을 받았다.

신흥무관학교가 중도에 문을 닫지 않고 뛰어난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일제가 국권을 침탈했을 때 특히 서간도에는 훌륭한 인물들이 대거 모여 들었다. 이렇게 각지에서 지사, 무관들이 서간도에 집결한 것은 한말의 유력한 독립운동을 위한 비밀결사체였던 신민회의 역할이 컸다. 신민회에서 만주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자는 결의에 따라 집단적으로 망명한 것이 중요한 출발점이었으며, 영남의 유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참여한 것이다. 이

석영, 이회영·이시영 형제와 이상룡, 김동삼, 김형식 등 안동에서 온 망명자, 이동녕, 윤기섭, 여준, 이장녕, 이세영, 김창환 등이 이들이다.

신흥무관학교는 물질적 토대가 견고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이회영의 형인 이석영은 영의정이었던 이유원의 양자로 당대 최고의 거부 중 한 명이었으며, 이들 6형제가 처분 한 재산은 40만원이나 되었다.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약 600억원에 이르는 큰 재산 이었다. 신흥무관학교가 유하현 추가가에서 1912년 통화현 합니하로 각종 시설을 갖춘 번듯한 새 교사를 마련하여 이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석영의 재력이 뒷받침되었다. 또한 추가가에서 현지인들과의 갈등이 심각했을 때 이회영이 직접 북경을 방문하여 원세개 대총통을 만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을 받아 학교부지 선정과 현지인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던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그렇지만 1910년대 중후반 재정이 어려웠을 때에는 안동 등 여러 지역에서 가져온 자금이나 가난한 서간도 주민들이 성심성의로 마련한 자금이 학교운영에 기여했던 것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신흥무관학교가 10년 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현지 조선족사회의 구조적인 연계 활동이 큰 역할을 하였다.

신흥무관학교가 개교하기 전에 망명 이주민들의 자치조직인 경학사를 창설하였다. 경학사는 영농을 통하여 지급자족의 기반을 마련하고, 학업을 통하여 계몽운동을 전개하면서 신흥무관학교를 뒷받침한 토대가 된 것이다. 한편 무관학교 개교 이후에 유하현, 통화현 등 조선족 집단 거주 지역에는 학교(서당)를 개설하여 청소년들에게 민족의식과 신학문을 교육 하였다. 만주의 조선족교육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지역에 30여개의 학교가 있었다고 한다. 이 학교에서는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이 교육을 담당했고, 여기 졸업생들이 신흥무관학교에 진학함으로써 무관생도의 충원 모태가 된 것이다.

내년에 만주 유하현에서는 은양학교 개교 100주년을 맞아 조선족 교육 100주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하여 주민자치기구와 조선족학교, 그리고 신흥무관학교가 삼위일체가 되어 상호 보완 관계에 있었고, 서로 뒷받침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경학사(耕學社)는 후에 부민단, 한족회로 발전하게 된다.

경학사는 서간도지역 최초의 한국인 혁명결사로서 한국혁명운동의 효시라고 평가된다. 경학사는 이름 그대로 경제적인 실력을 쌓고 독립정신을 고취시키며 근대 교육을 시키고, 무력을 연마하기 위해 서간도에 온 망명자들이 1911년에 유하현 추가가 대고산 노천회의의 결의에 따라 조직하였다.

1915년 말 1916년 초에는 서간도 주민자치조직으로, 만주 부여 옛 땅에 부여 유민들이 부흥할 결사를 세운다는 의미와 이주민들을 부양한다는 뜻을 가진 부민단(扶民團)이 조직 되었다.

부민단은 10호에 십가장을, 백호쯤 되는 마을에는 백가장을, 큰 마을에는 천가장을 두었다. 일제의 한 자료에는 부민단에 1,229호 6,013인이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부민단의 주요 사업 중 하나가 고국에서 오는 동포를 맞이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었다. 그와 함께 중국인과의 계쟁(係爭)사건을 관장하는 등 행정 처리 뿐만 아니라 사법 처리 까지 맡은 명실상부한 자치행정기관이었다.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이 왕성해짐에 따라 부민단을 확대 개편한 것이 한족회다. 한족회는 매호에 의무금을 내게 하고 민·형사 소송까지 맡아 완전히 독립국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족회는 고산자에 새로 신흥무관학교 교사를 지어 본교로 했고, 쾌대무자에도 분교를 세웠다. 신흥무관학교에는 일본 육사출신 현역장교인 이청천과 역시 일본육사를 나온 장교인 김경천, 신팔균 등이 최신병서를 가지고 합세해 기세를 올렸다. 한족회와 같은 시기에 조직된 군정부는 독립군 조직이었다. 군정부는 상해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세워지자 그것을 옹호하였고, 명칭도 서로군정서로 바꾸었다.

신흥무관학교가 지속적으로 명성을 갖고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데에는 주로 이 학교 졸업자로 조직된 신흥학우단의 활동에 힘입은 바가 컸다. 신흥학우단은 무관 양성 등 독립운동 인재 양성의 참뜻을 계승하고 발전시켰으며, 신흥무관학교 및 분교와 지교, 부민단이나 한족회에 적이나 적의 앞잡이가 침투하는 것을 막는 자위조직의 역할을 수행 하였다. 신흥학우단이 신흥무관학교와 분교, 지교, 부민단-한족회에서 견인차이자 중추 신경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된 데는 독립정신을 고취시키며 계몽활동을 편 미디어로서 신흥학우보가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월간 또는 격월간으로 발간된 신흥학우보는 서간도 주민들의 교육잡지로서 주민들과 신흥무관학교, 부민단-한족회 등의 자치단체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5. 신흥무관학교 100주년을 맞는 우리의 과제와 사명

신흥무관학교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망명자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한다. 그들이 향유할 수 있는 모든 기득권과 영화를 마다하고 국권 회복을 위하여 험극의 길을 걸었던 선열들의 자세를 배워야 한다. 이들은 국가와 민족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과감하게 부귀영화를 버리고 민족적 양심과 정의감에 따라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배우고 실천하는 일이 무엇 보다 긴급하며,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흥무관학교 100주년이 우리에게 주는 당면한 과제와 사명을 짚어 봐야 할

것이다.

첫째, 신홍무관학교의 독립운동과정에서의 위상과 역할을 다시 찾아서 정당한 평가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신홍무관학교는 객관적인 역사적 대우를 받지 못하였다. 신홍무관학교가 독립운동 지도자들의 요람이었고 독립투쟁의 근원지이었지만, 1920년대 이후 만주지역에서 공산주의 조직활동이 활발했기 때문에 무장투쟁 자체의 평가나 연구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남북대결구도나 이념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합리적인 역사연구의 과제로 접근하여 경술국치 이후 잃어버린 민족의 기상과 역사를 찾는 것이 당연한 사명이다.

둘째,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소외된 무장투쟁사를 재조명해야 한다.

무장투쟁사는 일제식민사관의 영향을 받아 경술국치 이후 우리 민족의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특히 당시 지도층의 합의에 따라 합방이 성립되었다는 일제의 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의식적으로 무시된 경향이 있었다. 또한 남북대결구도에서 김일성이 무장투쟁을 정권의 법통으로 삼음에 따라 무장투쟁에 대한 연구나 논의가 불온시 되는 성향도 있었다.

이에 따라 독립운동사 연구의 일반적 경향이 임시정부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무장투쟁사 연구가 소홀히 된 추세에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는 개방적인 사고와 객관적인 역사 연구를 위하여 무장투쟁사에 대한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1930년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의 무장투쟁에 대해서도 같은 시각에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이번 기회에 우리 국군의 연원과 정통성을 찾아야 한다.

일본군 출신이 창군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출신소속을 산술적으로 분류할 때의 분석의 방법론에 불과하다. 창군과정에서 우리 국군의 이념이나 정신은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려는 대한제국무관학교-의병투쟁-신홍무관학교-독립군- 광복으로 이어온 구국의 정신이 면면히 흐르고 있는 것이다.

신홍무관학교 100주년을 맞아 국군의 연원을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 민족사의 맥락을 수용하여 그 뿌리를 찾아야 한다. 나아가서 북한의 주장을 뛰어넘어 국군의 연원과 정통성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를 찾아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할 것이다.

넷째, 신흥무관학교의 개교정신은 반드시 계승되어야 한다.

신흥무관학교는 을사늑약 이후 국민을 깨우쳐 자주독립을 지키려는 애국계몽운동을 하려고 조직된 비밀결사체인 신민회에서 출발한다. 신민회에서는 경술국치를 당하자 국권회복을 위해서는 무장투쟁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결의에 따라 만주로 망명하여 무장투쟁기지를 건설한 것이다.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은 이러한 숭고한 사명을 계승하기 위하여 해방이후 귀국하여 신흥대학교를 세운 것이다. 그러나 신흥대학교는 재단 임원 개선 이후 구국이념은 훼손 되었고, 학교 이름을 바꾸면서 뜻 깊은 역사성이 사장되었다. 이는 신흥무관학교에 대한 모독이며 민족사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배신이다. 재단의 임원이나 학교의 명칭은 바꿀 수 있지만 학교의 창업정신이나 역사성을 바꾸는 것은 죄악이다. 여기에 관련된 당사자들은 신흥무관학교 100주년을 맞아 이제는 학교의 역사를 제 자리로 환원하여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개교정신을 계승해야 할 것이다.

이제 신흥무관학교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들이 꿈꾸었던 세상이 어떤 것이었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가다듬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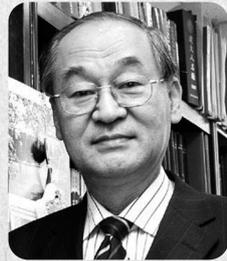
이회영이 삼한갑족으로서의 모든 기득권과 영화를 버리고, 6형제 전 가족이 굶주리고, 헐벗고, 생명을 바쳤던 고난의 길을 걸었던 그 이유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안동의 유림 이상룡 형제 대소가가 조상들의 위패를 땅에 묻고 가산을 정리하여 망명했던 결의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들은 조국을 되찾고 민족의 자존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말살하면서 오직 민족적 양심과 정의감에 따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험난한 독립운동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독립을 꿈꾸었던 망명자들은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만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 독립운동가들은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가 보장된 자주독립 국가를 세우고, 모든 민족과 나라가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독립운동에 뛰어든 것이다.

신흥무관학교 개교 100주년을 맞아, 선열들이 한결같이 염원하던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대동단결하여 민족통일국가 건설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부과된 사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㉞

3·1 운동 이후 한국의 사조는 왜 좌경했나?



신복룡
건국대학교 정치학 석좌교수

1910년에 그 많은 인구를 거느리고 그토록 훌륭한 유산을 가진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멸망한 예는 희귀한 일이다.

- 헨더슨(Gregory Henderson) -

1. 서론

역사에는 많은 굴곡이 있기 마련인데, 그중에서도 유독 크게 기록되는 순간이 있다. 그것이 빈번히 다가오는 것은 아니지만, '깨어 있는' 민족에게는 주기적으로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 기회를 잡은 민족은 다행이도 회생할 수 있으나 그 기회가 온 줄도 모르거나 왔음을 알면서도 그를 포착하지 못한 민족은 다시 회한(悔恨)의 시간을 보내며 그 기회가 다시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한국 근·현대사에서의 3·1운동이 바로 그러한 시점이었다.

3·1운동의 성격을 간단히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그것은 식민지 지배 하에서의 민족 운동의 방략을 다시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문화계에 끼친 영향이 컸고, 이 때 이후 좌파 이데올로기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한국 사상사의 분기점이 되었으며, 경제사에서는 부르주아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 측면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5·4운동과 같은 극동의 정치 사조에 영향을 미친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복합적 구성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3·1운동사의 연구는 전개 과정과 진압의 잔혹사를 다루는 '운동사'에 치중하였고, 그 사상사적 흐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곁길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3·1운동은 한국 근대사상사에서 합수(合水)머리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지 않으면 그 당대는 물론이고 그 후대에 끼친 사상적 연속성을 이해하는 데에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종래의 연구사는 분노에 찬 민족주의 사관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갖는 데 소홀했다. 이제는 3·1운동의 전체상을 보아야 하며 그 한 부분으로서의 정치사상사적 의미를 소홀히 할 수가 없다. 이 글에서는 주로 사조사(思潮史)로서의 3·1운동사를 다루고자 하며, 3·1운동 이후 한국의 사조가 왜 좌경화되었는가를 살펴보는 데 국한하고자 한다.

2. 식민지 수탈의 현실

식민지 시대의 민족 운동은 독립 자체만으로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근대화의 추구라는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주의는 경제와 그 역사적 발전의 궤적을 함께 하고 있다. 경제와 민족주의는 상호보완적이다. 민족주의적 열정이 경제 부흥의 활력이 되는 경우도 있고, 경제력이 민족주의의 추진력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점에서 경제와 민족주의와의 만남은 민족주의가 이상에서 벗어나 이데올로기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

식민지 지배 체제는 기본적으로 해상권을 바탕으로 하여 인접한 대륙 국가에 식민(植民)과 시장 개척 그리고 원료 수탈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피식민지 국가 인민들로 하여금 경제적 민족주의에 고뇌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논리적으로 볼 때 경제적 식민지주의는 자유주의와 매우 친화적이다. 거주·이동의 자유, 상품과 노동력 이동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식민지주의는 자신을 정당화했다. 식민지주의에서 이민과 식민은 명확히 구별 짓기 어렵다. 식민지를 문명화한다든지, 그들에게 자치 내지 독립을 허용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국의 이익을 위해서이고 이것이 식민지주의의 본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국가가 원치 않을지라도, 그리고 피식민지 국가가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식민정책은 피식민지 국가를 문명에 노출시키는 역설적 효과가 있었다. 그들은 수탈을 당하면서 경제를 배운 것이다.

식민지 정책의 가혹함이 가장 잘 들어난 것은 토지 점탈이었다. 1908년에 설립된 동양척식회사(東洋拓植會社)를 통한 토지 겸병(兼併)은 토지를 영혼처럼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정신적으로 의지할 곳을 장악하는 것이라고 일본의 식민지주의자들은 생각했다. 이 회사는 한국인들에게 하나의 원부(怨府)였다. 토지 조사 사업의 전국적 실시는 1905년에 보호 정치의 개시와 함께 시작된다. 1906년에는 외국인이 토지 소유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토기가옥증명규칙'과 '토지가

옥저당규칙' 이 공포되고 1910년 초에는 한국 정부 내에 토지조사국이 설치되어 이들 규칙 실행의 중앙기관의 역할을 하다가 같은 해 8월에 조선을 병합하자 임시토지조사국으로 개칭되고, 1912년에는 조선민사령과 부동산증명령 등이 발표되고 사유권의 확립을 목적으로 토지의 소재·가격·지형 등의 조사·측량을 시행할 토지 조사 사업이 실시되었으며, 1918년에 이르러 사업은 일단 종료되었다. 토지 조사 사업의 과정에서 우수한 자본력을 가진 일본인에게도 토지의 대부분이 집중되었다.

그러한 토지 점탈의 결과로 1915년에는 945,308호이던 빈한한 소작농과 토지 없는 농민이 1919년에는 1,003,003호로 증가하였다. 이와 반대로 일본인 및 본토 지주계급 수증으로 토지가 집중되는 양상은 1915년에 39,405호였던 지주가 1919년에는 80,386호로 격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이 일본의 식량보급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일본 본토의 농업은 봉건적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산력의 발전은 여전히 억압되고 있었다. 따라서 1900년대에 이미 일본은 외국 쌀의 수입이 필요했고 이후 외국 쌀의 수입은 매년 증가하여 수백만 섬을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수탈에 따라서 조선 경제의 발전은 대체로 조선에 있는 일본인의 발전이었고, 다수 조선인의 경제는 피폐해 갔다. 이는 조선의 산업 발전을 대비하여 조선 농민의 곤궁함을 비춰봄으로써 증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현저한 현상으로는 자작농의 몰락, 일본과 만주에서 방황하는 노동자와 화전민의 증가, 소비 경제의 기이한 현상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쌀의 소비량은 1901년에 1인당 7.025말(斗)이던 것이 1923년에는 6.182말로 감소되고 조(粟)는 2,380말에서 3,481말로 증가하고, 밀가루는 0.0466엔에서 0.5308엔으로 올랐다.

광공업 분야에서의 수탈은 더욱 가혹했다. 본시 전근대 사회에서의 한국 사회는 공업 개발에 무심했다. 일본인들은 이를 잘 알고 있었고, '조선광업법'(1906)과 '조선광산령'(1915)을 통하여 채굴권을 장악했다. 공업 분야에서도 수탈은 여전히 임금은 일본인 노동자 임금의 40~60%에 지나지 않았으며, 하루 노동 시간은 17~18시간이 보통이고, 특히 부인과 소년 노동자의 생활수준은 비참하였다. 기술 이전은 열악하여 공업 지식을 얻을 기관이 없었고, 유일의 기관으로 공업전문학교가 1개소 있을 뿐이었으며, 교과는 안료(顔料)와 비누 등 극히 간단한 일용 제조에 관한 것들뿐이요, 문명적 기계에 관한 교과는 거의 없었다. 철도·선박·전신·전화·우편 등의 기관에 관계된 기술적 지식은 한국인에게 교수하지 않았다.

금융업을 보면, 조선은행·척식은행·식산은행 등 일본인이 경영에 관계하는 은행 회사는 물론이요, 한성은행·한일은행·상업은행 등 조선인이 경영에 관계하는 은행에 약간의 대출금(貸下金)이 있음을 빙자하여 끝내 총독부로부터 간섭을 받아 지배인 이하 중요 은행은 전부 일본인을 채용하였다. 또한 각 지방에 산재한 금융조합의 이사도 전부 일본인을 채용하니 금융상 대차(貸借) 관계는 반드시 재산과 신용과 사상의 소통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성립되었다. 금융기관

의 수뇌자는 전부 일본인이며 신용 대치는 전혀 없고, 반드시 담보품을 제공한 연후에야 금융의 길을 얻으니 이 금융의 불충분함이 상업상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것이 짐작하기 어렵지 않았다.

이러한 금융상의 차별로 인하여 상품 시장으로서의 식민지 조선은 제국주의 일본의 식량 보급지로서 봉사해야 하는 동시에 또한 그 자본주의적 생산품의 판매 시장으로서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일본의 대조선 수출액의 추이를 보면 1910년부터 1926년까지 25,348,000엔에서 248,235,000엔으로 증가하여 10배의 신장을 보였다. 결국 제국주의 일본의 자본가들은 식민지에 대한 상품 수출로써 거대한 이윤을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에 대한 직접적인 자본 투하로써 막대한 초과 이윤을 획득하고 있었다. 오래 전에 몽테스키외(Baron de Montesquieu)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은 종교적 죄의식(罪意識)이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 토록 수탈에 잔혹하다.

3.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懷疑)의 발생과 좌경화

이상에서 논의된 일본 식민지 정책의 착취는 한국인들로 하여금 식민지주의의 정체와 자본주의, 그리고 결국에는 경제적 민족주의에 눈뜨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런 점에서 3·1운동에는 부르주아민족주의의 요소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적 전이(轉移)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첫째는 자본주의 이념에 대한 의구심의 발생이었다.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를 낳고, 제국주의가 일본 식민지주의의 모태라면 자본주의는 더 이상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아니라는 판단이 서게 되었다. 그들에게 자본주의는 적의 이념이었고 축복이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식민지주의와 연루되지 않은 제3의 대체 이념에 대한 모색의 기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는 중에 사회주의의 환영(幻影)이 그들 앞에 어른거리기 시작했다.

일제의 수탈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두 번째 현상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배신감이었다. 당시 독립 운동의 지도자들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들이 자신의 후원자가 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것은 풋살은 이념이 빛은 순진함이었을 수 있다. 그러다가 저들이 국제무대에서의 동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미국과 서구 열강에 대한 한국인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좌절과 실망도 컸다. 미국이 한국을 버린 이상 미국이 더 이상 희망처가 될 수 없다는 체념이 머리를 들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운형(呂運亨)이었다.

마침 그 무렵에 북방 국경을 통해 들려오는 것은 2년 전의 러시아혁명의 '복음'이었다.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러시아혁명의 모델이 민족 해방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러시아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하여 국제정치에서 자본주의적 착취의 도구인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을 시작했다. 러시아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1919년에 이르러 레닌(V. I. Lenin)이 제2차 코민테른회의를 통해 식민지 지역에서의 반제국주의운동을 고무함으로써 식민지 지역의 민족 해방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것임은 틀림없다.

이상과 같은 두 가지의 사상적 전이는 결국 당시의 한국인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에 눈을 돌리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현상은 3·1운동과 사회주의가 공유하고 있는 민주주의적 요소로 인하여 가속화되었다. 사실상 3·1운동은 동학(東學)농민봉기 이후 민주주의의 재발견이었다. 여기에서 3·1운동과 사회주의가 만나는 접합점이 마련되었는데 그러한 현상 중의 한 대표적인 표현이 곧 대동단(大同團)의 출현이었다. 1919년 4월경에 창단된 대동단은 크게는 대동주의(大同主義)를 표방하면서 분열된 민족 전선을 통합하여 3·1운동의 여세를 지속하기 위해 조직된 비밀 결사였다. 대동단은 그의 강령이라 할 수 있는 대동단 임시 규칙 제3조에서 “본단은 사회주의를 철저히 실행한다.”고 표명함으로써 자신의 노선을 분명히 했다.

결국 3·1운동에 포함된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볼 때, 3·1운동 이후 민족 운동이 종래 지사(志士) 중심의 운동에서 탈피하여 대중 속으로 확산되었고, 특히 사회주의운동의 발생 및 발전, 그리고 공농(工農) 대중 및 청년 학생의 반제·반봉건투쟁이 확대되어, 운동의 기초를 광대한 대중 투쟁 위에 설정할 수 있었던 점이라든가 종래의 막연한 충군·애국주의나 부정확한 정치 견해를 벗어나 현대적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사상을 흡수하여 혁명 이론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던 점, 그리고 종래의 분산적이고, 자연발생적이거나 종파주의적인 혁명 단체를 소멸시키고, 현대적 혁명 정당의 출현을 유도했다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한일합병 10년 동안 지속된 일제 통치의 성격을 살펴보면, 억압 속에서의 좌절과 분노는 한국의 독립을 위해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었고, 여기에 국제적인 조류를 감지한 해외 지식인들의 쫓겨, 그리고 해외 지식인들과 국내 민족주의자들의 의견 교감을 통해 민족적 요망과 염원이 분출된 것이 곧 3·1운동이었다. 3·1운동은 독립과 자주는 물론 봉건적 질서의 청산을 통한 민주적 시민 사회를 건설하려는 의식과 세계 평화에 대한 인식의 출발점이었다는 점에서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분기점을 이루는 사건이었다.

이러한 사상적 전개 과정에서 원시적 형태이기는 하지만 3·1정신에는 초기 산업자본주의에로의 이입과 경제적 민족주의의 자각이 내포되어 있었다.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 진출이 그들의 미완성된 자본주의의 모순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로서의 경제적 수탈이었다는 점을 간파한 한국 민족주의는 3·1운동을 계기로 하여 민족주의의 경제적 측면을 중요시하기 시작했다. 이는 정치적 자유의 획득을 주요 목표로 했던 종래의 민족주의가 이를 계기로 하여 경제적 민족주의

로 발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3·1운동에는 부르주아민족주의의 성격이 담겨 있다.

그러나 3·1운동을 통한 '경제의 발견'은 역설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절망과 그 주체 세력인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혐오감을 유발함으로써, 그 예기치 않은 결과로서 러시아혁명에 대한 선망(羨望)을 불러일으켰고, 좌파이데올로기가 출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3·1운동은 주로 청년 지식인들이 주축을 이뤄 전개된 민족 운동이었으나 종래의 어느 민족 운동보다도 계층을 초월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했다. 종래의 민족 운동은 계급적 파편화와 배타주의를 극복하지 못했었는데, 3·1운동은 계층·지역·신앙·성별을 초월하여 전개됨으로써 한국의 민족주의가 민중통합적인 기반 위에 서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한국사에서의 민중주의는 이때부터 맹아(萌芽)되어 대중 투쟁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러한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내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3·1운동은 미완의 혁명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3·1운동의 실패 원인으로는 대체로 주도 세력의 지도력 부재, 대중적 역량의 미성숙, 국제적 조건의 미비 등을 꼽을 수 있다. ㉔

* 참고 문헌 *

- Emerson, R., From Empire to Nation (Boston: Beacon Press, 1962)
- Hayes, Carlton J. H., The Historical Evolution of the Modern Nationalism (New York : Macmillan Co., 1955)
- Henderson, Gregory,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 Montesquieu, Baron de, The Spirit of the Laws (New York: Hafner Publishing Co., 1949)
- 姜徳相(編), 「現代史資料: 朝鮮: 3·1運動(1)」(東京: みすず書房, 1977)
-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4): 1918-1919」(국사편찬위원회, 1975)
- 金俊燁·金昌順, 「韓國共產主義運動史」(2)(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1972)
- 「대동단사건」(II)(국사편찬위원회, 1988)
- 「每日申報」
- 「백남운전집(4): 회보」(이론과 실천, 1991)
- 「3·1운동독립선언서와 격문」(국가보훈처, 2002)
- 신복룡, 「대동단실기」(선인, 2003)
- 신복룡, 「한국분단사연구: 1943-1953」(한울출판, 2006)
- 이나미, 「일제의 조선 지배 이데올로기」, 「정치사상연구」(9)(한국정치사상학회, 2003)
-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4): 1918-1919」(국사편찬위원회, 1975)
- 전석담, 「민중조선사」(범우문고, 1989)
- 「朝鮮總督府官報」
- 陳德奎(編), 「한국의 민족주의」(현대사상사, 1976)
- 한상도, 「한국독립운동과 국제환경」(한울출판, 2000)

‘한일군사동맹’의 반민족성



김삼웅
前 독립기념관장

일본군 끌어들이려는 무모한 역사인식

“미국이 최종적으로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지배적인 지위를 잃어버릴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일본은 중국과 손을 맞잡을 가능성이 높다”

새뮤얼 헌팅턴이 1998년 도쿄에서 한 강연 ‘21세기 일본의 선택: 세계정치의 재편성’에서 언급한 말이다.

〈월스트리트 저널〉등 미국의 언론들은 지난 해 12월 13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세계최고 경제대국’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7%가 중국을 꼽았다고 보도했다. (〈한겨레〉2011년 1월 15일)

지난 해 하반기에 일본을 누르고 세계2위 경제대국이 된 중국의 미국 추월 시기를 학자들은 20~30년 앞으로 내다본다. 21세기 전기는 미국과 중국의 2대 강대국 지투(G2) 또는 중국의 패권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차이메리카' 라는 조어도 등장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기타자와 일본 방위성장관이 1월 11일 "한·일 군사협력을 심도 있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은 사실상 한·일 군사동맹을 지향하는 시발로 보인다. 군사비 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에 이어 군사동맹으로 이어져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사력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을 트게 된다.

지난 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뒤 서해와 동중국해에서 한·미, 미·일 연합훈련이 실시되었다. 며칠 후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여 양국의 군사협력을 촉구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한·일 군사협정의 추진이다. 한·미·일 군사동맹 또는 군사협력체제는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를 결속시키고 냉전시대의 구도를 다시 불러오게 되며 한국은 이들 국가에게 불편한 존재 또는 적대적 존재로 변해 20년간 닦아놓은 북방정책을 근저에서부터 허물게 된다.

한반도가 1894년 동학혁명으로 분란일 때 일본군은 불청객으로 이 땅에 상륙하여 주둔하면서 결국 무력으로 한국을 병탄했다. 117년이 지난 오늘 다시 남북한 대결의 틈새를 노리고 일본자위대가 한반도 상륙을 기도한다. 동족간의 내전이 일제를 불러왔고, 동족끼리의 분란이 일본 자위대를 부른 형국이다.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배가 한반도 분단의 원초적 요인이 되었고, 다시 일본군이 남쪽 군대와 협력하여 북쪽을 치겠다는, 되풀이 되는 통절할 민족사의 비극이다.

작년 한 해만해도 우리 수출의 25%가 중국에 치중되고 이것은 미·일·유럽연합(EU)에 수출한 금액의 합과 비슷하다. 돈은 중국에서 벌고 미·일과 대중국 군사포위망을 만든다고 중국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다. 중국이 언제까지 이런 구도를 보고만 있을까?

이명박 정권이 북방관계를 적대하고 남방에만 몰입하는 것은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졸책이다. 400여 년 전 친명 세력이 광해군의 명·청 등거리 외교를 쿠데타로 뒤엎고, 석양길에 들어선 명나라에 충성하고 신흥대국으로 발돋움하는 청나라를 적대시했다가 정묘·병자호란을 당했던 아픈 역사가 있다. 지금 북·중·러시아의 경제협력이 급속히 강화되고 있다. 나진항의 장기 사용권, 두만강 개발계획, 신 압록강 대교건설, 압록강 하구 섬 개발에 이어 북한의 천연자원이 속속 중국기업으로 넘어가고, 심지어 이성계가 회군했던 위화도가 중국에 100년 동안 조차된다고 한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이 “우리 산 밑에 보화가 무지하게 난다. 이것을 우리끼리 나눠먹어야지 어떻게 중국에 주냐?” 했다고, 회담에 배석했던 문동환씨가 최근 증언했다. 겨레의 미래를 위해 ‘북한의 보화’ 즉 귀중한 천연자원이 중국에 반출되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

한반도 분단의 사력을 안다면, 이명박 정권은 현재와 같은 민족분열정책과 미·일 의존적 일방 외교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민족분열 정책과 외세에 의한 민족분단 획책의 사례를 찾아보자. ① 648년 당태종과 신라 김춘추의 나당동맹으로 백제·고구려 멸망 ② 1593년 임진왜란 때 일본 도요토미가 명나라에 조선 남쪽 4도 분할제의 ③ 1894년 영국 외무장관 존 김벌리 서울 북쪽은 청나라, 남쪽은 일본점령 제의 ④ 1896년 일본특사 야마가타, 러시아에 한반도 39도선 분할지배 제의 ⑤ 1903년 주일 러시아공사 로마노비치 로젠, 7년 전 일본 제안대로 한반도 39도선 분할지배 제의 ⑥ 1905년 미국 태프트와 일본 카츠라, 일본의 조선식민화, 필리핀의 미국 식민화 밀약 ⑦ 1945년 미·소 한반도 분단점령.

이와 같은 아픈 역사의 과거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거나 자위대를 끌어들이기 전에 남북 화해협력의 구도를 복원하고 평화통일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미·중·일·러 주변 4강과의 균형 있는 외교정책으로 분단을 종식하고 통일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친일의 혈통을 받고 군사독재의 모유로 성장한 반민족·반민주·반통일 세력의 포위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대통령은 2년 뒤에는 권력의 끈을 놓게 된다. 10년 100년 뒤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하면서 남북문제와 특히 일본과의 군사동맹 체제와 같은 대일 정책은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한다. 헌팅턴의 예측도 참고하면서 말이다. 권력은 짧고 민족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역사교훈 있으면 비극 되풀이 돼

일본은 한국 내부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김없이 한반도 침략을 획책해왔다. 1882년 한국에서 임오군란이 벌어지자 조선정부에 강력히 위협을 가해 제물포조약을 맺도록 했다. 일본은 군함 4척, 수송선 3척에 1개 대대병력을 동원하여 조선정부를 위협했다. 일본 정부는 특사에게 거제도나 울릉도를 할양받을 것, 조선이 무성의하면 무력으로 인천을 점령할 것 등을 지령했다.

제물포조약은

- 조선 측의 50만원 배상
- 향후 5년간 일본공사관에 1개 대대 일본경비병 주둔
- 조선 측의 공식사과를 위한 수신사 파견
- 임오군란 주모자 처벌

등이었지만, 일본이 노린 것은 일본공사관 보호라는 미명 하에 일본경비병의 한양 주둔이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일본군 주둔 비용을 조선 정부가 부담한다는 내용이었다. 임오군란을 빌미 삼아 한국에 상륙한 일본군은 1592년 임진왜란으로 조선을 침략하여 7년 뒤에 철수한 지 284년 만에 ‘공식적’으로 한반도에 재상륙하였다. 이에 앞서 1875년 일본군함 운요호가 강화도 초지진에 상륙하여 수병과 민간인을 학살하는 등 만행을 저질렀지만, 아직 군대를 한반도에 주둔시키지는 못한 상태였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군대를 파병한 것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으로 조선이 왕권과 농민혁명군 사이에 내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을 때였다. 텐진조약을 명분으로 일본군은 한반도에 무단으로 상륙하여 동학농민군 10~20만 명을 학살했다. 당초 일본군은 1894년 6월 10일 오시마 소장이 해군 육전대 480명과 순사 20명, 포 40문을 갖추고 서울에 진주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8,000명의 군대를 인천·부산 등지에 파병하여 동학농민군의 학살에 앞장섰다.

일본군은 영국에서 개발한 무기를 수입한 스나이더 소총과 일본에서 자체 개발한 무라타 소총으로 무장했다. 일본군은 구식화승총과 죽창, 농기구로 무장한 동학농민군과는 상대가 되지 않은 화력으로 동학군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진압 뒤에도 철수하지 않고 한국에 주력 부대를 상주시켰다. 1895년 명성황후를 살해한 을미사변은, 일본공사 미우라가 일본 낭인과 군인들을 동원하여 황후의 침실 옥호루에 난입하여 명성황후를 죽이고 시체에 석유를 뿌려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일제는 한반도와 만주의 지배권을 노리며 러일전쟁을 시작했다. 1904년 2월 8일 일본 해군이 인천 앞 바다에 정박한 러시아 군함을 격파하면서 러일전쟁을 도발하고,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었다. 수십만 명의 일본군이 한반도를 휩쓸었다. 러일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재빨리 군대를 서울에 진주시키고 무력으로 한일의정서를 체결한 데 이어서, 1905년 군사력을 동원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을 강요했다. 그리고 1907년에는 정미칠조약을 통해 일본군의 위협 아래 한국 군대를 해산시키기에 이르렀다.

일제의 국권침탈과 군대해산에 저항하여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자 일제는 한국 주둔 군대와 증파된 군대를 동원하여 의병을 학살하고, 특히 1909년 9월과 10월에는 6천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이른바 '남한대토벌 작전'을 전개하였다. 일제의 이 학살 작전으로 수천 명의 의병이 참혹하게 희생되었다.

일제는 1910년 일본 군경의 삼엄한 호위 아래 한국 병탄조약을 체결하고 마침내 대한제국을 멸망시켜 식민지로 만들었다. 이후 1945년 패망할 때까지 일본군 제19, 20사단을 서울 용산과 대구 등지에 상주시키면서 한반도를 무력으로 점령·지배·통치하였다.

일본군이 한반도에서 쫓겨 간 후 일본은 6·25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기화로 엄청난 경제적 부를 축적하고, 재무장에 성공하면서 기회만 오면 한반도 '재상륙'을 기도해왔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지지하고, 역대 군사독재 정권을 지원하면서 '분할통치'의 전략을 구사해왔다.

한일군사동맹은 동양평화 교란

전후 일본은 특히 한국에서 만군·일본군 출신들이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정권 이래 친일



▲ 지난 1월 11일 일본 방위상 사령부의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 모습

정권과 유착하면서 대북 적대관계를 강화하고, '두 개의 코리아'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일본의 대외정책의 기본은 한반도의 분단 고착화이다. 반세기 이상의 분단 상황에서 남한은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루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북한은 국제적 고립 속에서

도 핵무기를 개발하여 일본이 위협을 받을 정도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투 코리아'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어 단일 국가가 되었을 경우를 상상하면서 공포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일본은 1890년대에 이미 죠스벌(長州伐)의 대부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가 제국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전략적 관심 범위를 제시하였다. 국가의 생존에 사활이 걸린 중요한 공식 영토를 이른바 '주권선'으로, 일본의 비공식 세력 범위로서 본토를 위해 필요한 완충지대를 '이익선'이라고 규정했다. 이후 일본에서는 지금까지도 야마가타의 원칙 즉 일본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주권선을 방어하고, 이익선인 조선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일본은 '이익선'의 보호를 위해 다시 한국 정부와 군사동맹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강제 병탄 100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와 불법조약의 무효를 요구하지 않은 이명박 정권과, 사죄·무효를 선언하지 않은 일본 정부가 과거 청산을 외면한 채 군사동맹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인류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동양평화를 짓밟는 범죄행위다.

일본정부로서는 자국의 '이익(선)'을 위해 취하는 책략이라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동족을 제거하기 위해 외국을 끌어들려는 행위는 7세기의 '나당동맹' 이래 최악의 반민족행위가 될지 모른다. 따라서 한일 군사동맹은 어떤 명목으로도 용납하기 어렵다.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한 민족은 비극이 되풀이 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

일본은 기회만 있으면 한반도에 군침을 흘리고 약체인 듯 보이면 무력침략을, 힘이 부치다 싶으면 분할을 통해서라도 지배하고자 한다. 한일 군사동맹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 그리고 남북통일을 위해서도 백해무익한 일이다. 21세기 동북아 질서에도 반하고 한중 관계에도 유해한 졸책이 된다.

한일 군사동맹을 맺게 되고, 어느 날 일본은 미국이 중국에 밀린다 싶으면 거침없이 미국을 차버리고 중국과 손을 잡을 날이 올지 모른다. (헌팅턴의 분석이다) 그리되면 한국의 처지는 어찌될 것인가.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이명박 정권의 우매한 외교정책이 자칫 인조와 친명 사대세력의 외교 실패로 인한 병자호란의 재판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

한·일 군사협력 강화의 배경 및 문제점과 대안전략



홍 현 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한·일 군사협력 강화 합의

지난 1월 10-11일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이 한국을 방문하여 김관진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등 양국간 국방 교류협력을 확대·심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 외무장관이 2월 16일 도쿄에서 양국간 방위·안보 협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기 때문에 향후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은 유엔평화유지(PKO)활동,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조와 해군간 수색·구조훈련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물자와 식량, 연료 등을 상호 지원하는 협정으로 기능적 협력 증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군사비밀보호협정은 상호간에 제공한 군사정보에 대해 정보의 비밀등급에 맞게 제공받은 국가가 자국의 군사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인데,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등 군사 정보를 양국이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양국간 군사협력을 한 단계 더 격상시키고 심화시키는 것이다. 국가간 군사교류협력은 신뢰구축의 초보단계로 인도적 수색·구조훈련을 시작하고, 상호군수지원협정과 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한 뒤 연합군사 훈련으로 단계를 높여 나가는 게 통례이다. 우리 국방부가 한·일 군사협력이 초보적인 논의 상황이고 낮은 수준의 교류협력이며 합동 군사훈련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양국 수뇌부가 최근 보인 행보를 보면 준동맹 수준으로 격상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물론 우리의 유일한 군사동맹국인 미국이 일본과도 동맹이므로 한국이 일본과 준동맹국적 간접 군사 협력관계를 맺어왔고, 최근에는 한·미 합동훈련과 미·일합동훈련에 서로 참관단을 파견하는 등 협력을 증진해왔다. 그러나 1965년에 미국의 중용으로 한·일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했지만 일본은 올바른 사과를 하지 않았고 개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은 등 제대로 된 배상을 하지도 않았으며 수많은 우리 문화재 반환에도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과거사 반성도 몹시 미흡한데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등 태도가 변한 것이 없는데 갑자기 군사 협력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합의 배경

이명박 정부는 지난 3년간 북한과 기싸움을 벌여왔고 특히 재작년의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와 제2차 핵실험, 작년의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등 두 차례의 군사 도발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일본의 외교적·군사적 지원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북 압박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을 두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09년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시 요격하겠다고 소동을 퍼다 조기경보체제 오작동으로 망신만 당했던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려면 한반도를 벗어나지 못한 발사 초기단계에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요격해야 자국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사일 방어(MD)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한국과 군사협력을 추진해온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작년 가을 다오위다오(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 영토 갈등에서 중국의 강공에 굴복했던 일본으로서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견제를 위해 미·일동맹 뿐 아니라 한국의 지원도 확보하려는 계산도 다분히 깔려 있다.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 오바마 행정부는 동맹과 해외 주둔 미군의 경비를 절약하는 효율적 관리와 책임 완화를 위하여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 호주 등이 서

로 군사협력을 강화하도록 권고해왔다. 동맹의 그물망을 만들어 연계시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미국의 비용과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어 계획을 축소하고 있는 MD 사업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을 끌어들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한·중간 경제 협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므로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복합 동맹 구조로 엮매어 두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이 지난해 말 도쿄에서의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이 과거 문제를 초월해서 한·미·일 3국의 훈련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한·미·일 3국의 수뇌부가 모두 한·일 군사 협력의 격상을 바라는 동기가 존재하므로 어렵지 않게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석연치 않은 일본의 의도

일본은 2007년 12월 SM3 요격미사일 발사 시험 시 우리 해군 참모총장이 참관을 희망했으나 거절한 바 있다. 이런 일본이 우리와의 정보협정 체결에 열의를 보이는 것은 전술한 미사일방어체제의 효용성 유지를 위한 것 외에도 한반도의 미래에 관여, 한·미·일 대북·중·러간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이를 명분으로 방위력을 증강, 그리고 중·일 갈등에서 우군을 확보하는 의도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작년 12월 6년만에 채택한 신방위대강에서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중국이 사실상의 가상의 적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일본의 외교적 행태를 볼 때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한다. 먼저 일본은 신중한 기초를 유지하다가 기회가 열리면 날렵하게 행동하여 이득을 취한다. 1972년 2월 닉슨의 중국 방문 이후 미국은 1979년 1월에 가서야 미·중 관계를 정상화했으나 일본은 발빠르게 1972년 9월 중국과 관계를 정상화했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미 부시행정부가 대북강경책을 펼치자 일본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가 2002년 9월 고이즈미 총리가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과 회담하였다. 한·일 외무장관이 2011년 1월과 2월 ‘선남북-후북일대화’ 수순에 합의하였지만, 일본의 마에하라 외무상과 간 총리가 남북관계에 구애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북·일 협상을 진행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열어놓고 있으므로 한·일간 약속이 지켜질 지는 불확실하다.

또한 우리는 일본이 한민족의 화해와 단결보다는 분열과 갈등을 은근히 조장해온 점을 더

주의해야 한다. 일제가 한국과 중국에서 잔혹한 대량 살상 및 인체실험 등 비인도적인 만행을 자행하고 중군위안부제를 운영하는 등 인류사회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국가인데, 제대로 된 반성 한번 하지도 않았으면서 북한이 납치했다는 10여명의 일본인 피랍자 문제를 가지고 사실상 6자회담 개최에 장애를 형성하고 은근히 남북 대결을 조장해온 측면이 있다. 특히 한국 경제가 반도체, 전자, 조선, 자동차 등 주요 부문에서 일본의 경제를 맹추격하거나 능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20년 불황에 빠져 있으므로 남북한이 화해하고 협력하여 평화통일을 달성하기보다는 계속 분단되고 갈등을 벌이기를 내심 바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전략적 계산을 드러내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이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미국의 전략적 의도

전술했듯이 미국이 한·일 군사협력 강화를 권유하는 것은 미국의 경비 절감과 효율적인 동맹 관리 등의 편의를 위한 동맹그물망 형성과 MD의 효율적인 체제 완비 및 경비 조달뿐 아니라 미국이 구축 중인 대중 전략봉쇄망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한·일 군사협력 강화를 통해 결국 한·미·일 3각 동맹을 형성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 사안에서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먼저 그간 미국은 한국보다 일본을 더 우대해왔다. 카쓰라-태프트 조약은 말할 것도 없고 더 큰 문제는 일본에게는 평화적 핵 이용을 넘어 일본이 결심만 하면 수개월 내에 수십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 보유를 인정해온 반면 한국에게는 평화적인 핵 이용을 제한해왔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국제 투명성을 강화하더라도 산업용 재처리와 농축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독도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은 책임있고 공정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당시 협상 초안에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일본의 대미 로비 후 삭제되었다. 따라서 이제라도 미국은 무책임한 중립적 태도를 버리고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국제사회에 공표한 뒤 일본에게도 더 이상 무도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반중 동맹망에 엮어매어 놓는 것은 향후 한국의 국가전략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여겨진다.

동북아 신냉전 구도 형성 및 한·중 관계 악화 우려

중국이 지난 30년간 연평균 9.9%의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고 뉴욕발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불황 탈피가 상당 부분 중국의 성장에 의존하게 되어 중국의 위상이 급속히 제고되고 전세계가 중국을 팔목상대하고 있다. 미국 역시 중국을 G2로 인정하고 큰 틀에서의 협력 기조를 약속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미·중이 정면으로 대립·대결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합의일 뿐이다.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경쟁과 협력이 혼재되어 나타날 것이고, 전략적으로는 아직 패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인도, 몽고와 안보 협력을 증진하여 중국을 포위하고, 중국은 이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 모색, 다오위다오 분쟁 시 미국이 미·일안보조약이 이 지역에 적용된다고 공언한 것, 남중국해 영토분쟁에 대해 미국이 관여하고 나선 것, 연평도 포격 이후 미 항공모함이 서해에 진입한 것과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강화 및 군사 시위 등이 이를 잘 보여준다.

문제는 한국은 미·중에 비해 국력이 열세이므로 이들이 한반도의 장래에 대해 담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양국이 정면으로 세 대결을 펼칠 경우 우리는 그야말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막대한 국익 손실을 당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물론 향후 15년 이상 미국의 국력, 특히 군사력은 중국보다 우세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우리가 미국과 군사 동맹이라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우리는 미국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공유하므로 한·미동맹은 계속 유지·발전시키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나 미국과의 동맹에 더해 일본과도 동맹을 맺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세력이 불리함을 느껴온 중국은 우리에게 크게 반발할 것이다.

특히 한국이 향후 실현해야 할 국가 전략 목표들을 고려할 때 중국의 우호적인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면서 이를 제도화해야 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며 북한의 급변사태에도 만반의 대비를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아가 결국 이를 평화적으로 달성하여 2050년경에는 일본을 능가하는 세계 5위권의 선진 통일국가가 된다는 국가전략 목표를 갖고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국가전략 목표를 두루 순탄하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의 협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한·중 우호관계에 입각하여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어느 목표도 제대로 달성되기 어렵고, 달성되더라도 엄청난 비용을 수반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협력은 유용

하겠지만 핵심 사안은 아닌데 이를 도모하다 중국과 대립 관계를 형성한다면 우리의 국가전략 목표 실현은 난관에 처할 것이다.

한국의 대안전략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감안하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하여 한·미동맹에 더해 일본과의 군사협력 심화를 모색하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크다고 예상될 경우 정책을 재고하는 것이 순리이다. 이미 한·미관계는 과도할 정도로 친밀하다. 오히려 정부의 대미 편향 외교가 북한에 대한 강경책과 맞물려 남북관계는 정면 대결 양상에 처하고 북한의 핵능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중국의 협력은 더욱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도록 해주면서 평화 통일과 경제 번영을 향해 나아가려면, 정부가 출범 초부터 제창한 '상생과 공영을 추구하는 대북 실용정책'을 진정성 있게 시행하여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에서 다시 태동하고 있는 신냉전 구도를 완화·해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공연히 중국과의 관계만 더 악화시키기보다는 압박과 함께 대화와 호혜적인 경협을 동시병행적으로 북한에 구사하여 우리 정부가 바라는 것이 중국이 우려하는 북한의 붕괴가 아니라 남북 공존에 입각한 한반도 평화 회복과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점을 보여주어 중국이 자발적으로 우리의 대북정책에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정책이다. 한·일 군사협력 강화로 우리 국익에 위해가 되는 동북아 신냉전 구도 형성에 일조하기보다는 6자회담을 성공시켜 북한을 비핵화하고 남북한과 미·중·일·러 6개국이 공존·공영하는 기반으로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순리이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북한은 중장기적으로 자연스럽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흡수될 것이다. ㉠

북한의 4차 미사일 실험하면 한·미·일 집단방위체제 가시화된다!



김종대
D&D 포커스 편집장

‘별들의 전쟁’과 군사기밀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이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김관진 국방장관과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등을 논의하는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했다. 국방부는 “한일 양국 모두 협정체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이 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양국이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양국 군사관계 발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는 낙관적인 설명까지 덧붙였다.

최근 일본이 우리에게 군사협정, 그 중에서도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하자며 구애하는 배경은 한미일 3국의 미사일방어(MD)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제와 모종의 관련이 있다는 관측

도 나오고 있다. 2009년 5월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작년에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거치면서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위계획을 수정하고 있다. 지난 1월 9일, 중국을 방문한 게이츠 장관의 “향후 5년 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것”이라는 언급도 국내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 있다. 중국 방문을 마친 게이츠는 곧바로 한국에 들러 1월 14일에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환담을 했다. 여기에서 북한의 비핵화 방안과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제(MD)와 관련한 한국의 미래역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위협을 가시화함으로써 남북대화 역시 미사일과 핵실험의 모라토리엄(유예)같은 ‘진정성 있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현상은 20년 전에 한국과 미국이 전략방위구상(SDI)에 대한 첫 논의를 시작하면서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했던 사례와 비견된다. 논의의 시작은 20년 전인 1991년 11월 6일에 시작되었다. 이날 한미는「특허비밀보호협정(PSA : Patent Secrecy Agreement)」이라는 상호협정에 가서명했다. PSA란 한마디로 일반 공업기술소유권보호 개념을 군사기술분야에 적용시킨 특례적 성격의 협정이다. 모두 10개조로 된 PSA의 골자는 “국가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발명 정보에 대해 정보보유국이 비밀을 부여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는 국가도 그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 군사특허는 접수국에서도 비밀로 취급하되 ■ 그 비밀취급기한은 생산국정부의 결정에 따라 ‘무기한’ 계속될 수 있고 ■ 접수국은 군사특허정보를 정보목적에만 사용하되 그 정보를 이용한 제조생산은 물론 민수전환이 금지될 뿐 아니라 ■ 부득이한 경우 제조 및 생산 시에는 생산국의 사전승인과 함께 이에 대한 기술개발보상비 및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돼있다.

이 협정은 87년부터 약 3년 여 간 한미 간에 지루하게 이어진 치열한 논쟁의 산물이었다. 80년대 말에 미국은 소련의 미사일을 방어한다는 소위 ‘별들의 전쟁’으로 불린 전략방위구상(SDI)를 추진하고 있었다. 우주를 무대로 한 이 새로운 구상은 미국의 첨단 군사과학기술의 결집한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련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매우 야심적 구상이었다. 냉전시대 ‘공포의 균형’을 이뤘던 미소 양국의 전략미사일의 대치상황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전 지구적 충격을 가져왔던 구상이다.

당시에 미국은 이 구상에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국이 참여할 것을 강력히 희망했다. 2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미국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도 큰 관심을

보였는데 바로 이 때 미국은 SDI 참여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그것이 바로 PSA 협정 체결이다. 전략방위구상에 동맹국이 접근할 경우 군사과학기술이 유출되기 때문에 이를 미사일방어 등 군사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했던 것이다. 더 나아가 미 측은 이 협정이 군사정보 공조체제의 핵심 관건임을 명확히 했다.

20년 전의 재앙

PSA 협정 체결로 일어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한국의 주한미군 군사기지에서 미국의 군사 인공위성 정보를 수신할 때 한국군도 접근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91년 걸프전에서 선보인 미국의 최첨단 정보 전력을 필두로 한 새로운 전쟁술은 한국군에게 있어 엄청난 충격이었다. 북한의 핵개발로 불안한 정세에서 걸프전에서 선보인 최첨단 방공미사일, 즉 패트리엇 시스템은 한국 영공을 지켜 줄 구세주처럼 인식되었다. 특히 한반도 영공방위에 있어 오산에 위치한 미7공군 상황실의 지휘통제체계(C4I)를 한미가 공동으로 운용하는데 대한 요구가 커졌는데 PSA 체결로 이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한국 군부는 미국의 미사일방어 네트워크에 편입되기를 갈망하였고, 이것이 PSA 가서명의 배경이다. 문제는 올해 1월 초에 일본이 한국에 제안한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이 20년 전의 미국과 체결한 PSA와 거의 같은 맥락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몇 년 전에 주목할 만 한 사건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2007년 12월 18일 아침 7시.

새벽의 여명이 가시지 않은 시각에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곤고[金剛]에서는 우렁찬 굉음과 함께 SM3 요격미사일이 발사되었다. 일본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에 참여한 이래 가장 기념비적인 미사일 요격 시험이었던 이날, 일본은 온통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다. 일본은 총21억불이 소요되는 SM3 ‘블록2’ 개발비의 절반인 10억불을 부담하면서 미국과 공동으로 새로운 MD체제 구축을 추진한 터였다.

한편 이 시험이 있을 무렵 한국 해군은 매우 초조해졌다. 당시 송영무 해군 총장은 이미 10월부터 이 시험이 실시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군 장교들을 파견하여 참관하기를 강력히 희망했으나 미국은 이에 응한 반면 일본은 “절대 안 된다.”며 거부했던 것이다. 바로 이 때 미국은

한국과 군사비밀보호 협정을 체결한 관계였는데 반해, 일본은 “첨단 기술이 유출된다.”며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한국에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다. 송 총장이 이 시험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기울인 이유는 그해(2007년)에 진수된 국내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에 아직 미사일 요격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초조감 때문이었다.

한편 전임 한미연합사령관 B. B. 벨 대장 역시 그해 9월에 미 합참 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이 한국작전 전구를 지나 일본, 혹은 태평양을 날아갈 경우에 빈틈없이 작동하는 체계가 대응해야 한다.”며, “몇 분 혹은 몇 초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핵심사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목적을 알아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이 일본으로 갈 것인지, 미 본토를 향하는 것인지 신속한 판단을 하고 최단 시간 내에 요격을 해야 한다. 그런데 미사일이 한반도 전구를 벗어나면 한미연합사령관은 아무런 미사일 요격에 대한 지휘권한이 없다. 그러면 “이 미사일을 누가 요격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두고 심각한 혼란이 발생한다. 벨 사령관은 “지휘통제의 이슈가 복잡해진다.”며 이 문제를 조만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새로운 전략적 고민은 2009년 5월에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시험을 하면서 핵심적인 문제로 부각된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강행하기 직전부터 일본은 도쿄 시내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하고 “일본 영공 침범 시 요격하겠다.”며 원 없이 요란을 떨었다. 일본 내에서는 “2차 대전 이후 일본 영토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위협받은 것은 북한이 처음”이라는 인식이 확산된다. 더불어 일본의 입장에서는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공으로 다가오기를 기다려서 요격하면 그 때는 이미 위협이 엄청나게 증폭된 상황이라는데 주목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초기단계, 즉 북한 미사일이 한반도 전구를 벗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미사일을 요격하고 일본도 여기에 참여해야만 열도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북한 ICBM 성공 임박

여기에다 미사일방어와 상대적으로 거리를 둔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달리 이명박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 시스템에 참여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왔다.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어수선한 12월 초에 간 나오토[菅 直人]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 발언을 내놓았던 데 이어 새로 발표된 ‘신방위계획대강’에서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 역내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 호주, 인도 등과는 군사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한편 미국도 지난해 12월 8일 한국을 방문한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이 “한미일 3국의 합동 군사훈련을 희망한다.”고 돌출발언을 하고 나서 곧바로 일본으로 건너가 기타자와 도시미[北澤

俊美] 일본 방위상과 이 문제를 협의했다. 여기에서 멀린 의장이 말한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은 바로 3년 여 전에 벨 연합사령관이 말한 '새로운 지휘체계' 발언과 맞닿아 있다. 바로 여기에 새로운 '한미일 집단방위구상' 이라고 할 만한 새로운 가능성이 싹을 틔우고 있다.

일본은 지난 해 12월 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무장관은 "미국, 한국과의 공조태세를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의 틀 속에서 북한 핵개발 저지 등 후속 사태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말이 나온 직후 멀린 합참의장이 일본을 다녀가고 난 이후 올해 1월 초에는 요미우리신문이 한국군과 자위대의 군사협력을 주요 축으로 하는 '한일 신 공동선언' 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전 방위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마이니치신문도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항구적으로 자위대의 수시 해외 파병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맹국에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도 용인될 방침으로 전해졌다.

한미관계에서도 미묘한 변화의 흐름이 감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필자에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패트릭 오라일리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장(Missile Defense Agency, MDA)이 매년 한국을 방문하여 주요 직위자들을 면담하고 갔다."고 밝히며 "이 같은 현상은 지난 정부에서는 없었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오라일리 국장은 지난해 2월에 발표한 탄도미사일방어(BMD) 검토보고서 관련 하원 군사위원회 소위 청문회에 출석하여 "우리는 현재 20개국 이상과 미사일방어 프로젝트, 연구, 분석 작업들을 하고 있다."면서 "일본, 폴란드, 체코, 호주, 영국, 독일, 한국,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이 포함된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과 일본이 이와 같이 북한의 미사일방어에 서두르는 조급증은 바로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성공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3차 실험(09년) 당시에는 북한 미사일이 3000km를 날아가 우주 궤도 진입 직전에 추락했다. 이런 발전 추세라면 4번째 발사시험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미 미사일방어 국장이 우리 측 주요 관계자들에게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 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편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완성의 해를 준비하면서 최근 경수로를 재가동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재가동 시점은 김일성 탄생일인 2012년 4월 15일에 맞춰 조율될 것이다. 이 시점에 맞추어 북한은 우라늄 농축을 추진하는 등 핵 체계의 완성과 더불어 장거리 로켓 발사도 성공하겠다는 목표로 움직인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이 시점에서 한반도 명운을 좌우할 중대한 안

보위기의 기로에 놓이게 되고, 한미일 집단방위체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집단방위구상의 실체

이렇게 보면 일본이 서둘러 한국과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서두르는 배경이 명확해진다. 그것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범위를 초월한 미 국방부 차원의 미사일방어 구상과 미 태평양사령부 차원에서의 지역방위, 집단안보를 향한 첫 걸음이다.

그러나 일본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그것이 20년 전의 한미 PSA 협정과는 다소 다른 내용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91년 당시에 국방부 정책실에서 이 문제를 직접 담당하던 예비역 대령 J씨의 설명이다.

“미사일 방어 역량의 통합은 미국이 주도할 것이다. 일단 한국과 일본이 각자 미사일방어 체계를 갖추다보면 언젠가 미국이 이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방법을 제시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데이터링크와 같은 통합 시스템이다. 당사국들이 결심만 하면 ‘정보의 공조’가 ‘작전의 공조’로 가는 길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러한 작전의 공조는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될 것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북한의 4차 핵실험이다. 만일 북한의 4차 미사일 시험이 예전과 달리 로켓이 성공적으로 분리되어 우주궤도 진입에 성공할 경우 동북아에 지각변동을 초래할 충격을 준다. 미국은 즉각 북한의 미사일방어를 위한 한미일 3자 국방장관 회담을 제안하고 일본은 이를 수락한다. 여기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방어 무기체계를 미국의 단일한 시스템으로 통합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한국과 일본은 이를 수락한다. 이로써 한일 군사관계는 ‘정보의 공조’에서 ‘작전의 공조’로 전환된다. 한편 이를 예의주시해 온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격렬히 비판하면서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을 돌파할 신무기, 예컨대 다탄두 로켓 개발을 천명하고, 핵무기의 전진배치를 선언한다. 이제 동북아시아에 ‘신 냉전 구조가 출현’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구체화되는 것이다.

정부도 역시 이런 문제점을 의식했는지 1월 10일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마치고 “아직 협정이 체결되지도 않았고, 연내 체결될지도 의문이다.”며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연애만 하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밀월이 깊어지다 보면 슬금슬금 동거도 하고 결혼도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여기서 한일 군사협력이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될 경우 자위대에 대한 ‘빗장 풀기’로 이어진다. 이러한 변환은 한국에게 한국전쟁 이후 가장 가혹한 시련과 도전이 될 수 있다. ☉

조봉암 묘비에 무엇을 새길 것인가



양 권 모
경향신문 정치부장

그가 무도한 정권에 의해, 국가의 폭력으로 사법살인된 지 반세기하고도 2년이 지났다. 그 무참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세상은 여전히 그가 지향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여전히 냉전의 기운 속에서 전쟁마저 운위되고, 서민의 기본적 생활권을 확보하는 복지의 문제를 놓고도 오도된 이념의 시비가 횡행하고, 진보의 정치는 분열과 기득권의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때에 그의 죽음이 정적을 죽이려는, 이 땅의 진보정치 싹을 자르려는, 부패한 보수 독재권력에 의한 정치살인이었음을 확인하는 대법원의 재심 판결이 나왔다. 진보당 중앙위원장 죽산 조봉암 선생이 서대문형무소에서 국가보안법의 간첩죄로 사형당한 지 반세기가 넘는 2011년에서야 그때의 사형 판결이 잘못된 것으로 바로잡힌 것이다. “대한민국의 기반을 다진 정치인임에도 잘못된 판결로 사형이 집행됐다. 재심 판결로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바로잡는다”면서 대법원이 52년 만에

판결을 교정한 것은 값있는 것이지만, 너무도 늦은 후대의 속죄는 무참하기 짝이 없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세상은 너무 조용했다. 반세기 만에 바로잡힌 국가폭력과 사법살인의 결과에 대해 정부도, 정치도, 언론도 별 일 아닌 듯 넘어갔다. 그가 죽음으로써 씨를 뿌리고자 했던 진보정치도 예상된 논평을 빼고는 ‘아무 일’ 없었다.

이런 침묵과 무사는 조봉암과 함께 진보당 사건으로 법정에 섰던 이들이 모두 저 세상으로 떠난, 그 긴 50여년의 세월 때문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조봉암의 죽음과 반세기 만에 이뤄진 ‘잘못된 죽음’이라는 판결은 한 개인의 신원 차원으로 끝날 수 없기 때문이다.

2대와 3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승만 독재의 최대 위협이 된 그가 탄압과 죽음이 예비된 진보당을 창당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였나.



‘반세기 만의 복권’ 반성없는 정치

누대에 걸친 독재의 정권도 지울 수 없었던 역사의 기록 일단을 복기해보도 그것은 선명하다.

진보당이 창당하면서 내건 5대 강령은 이랬다.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의 달성, 공산독재 및 자본가와 부패 분자의 독재 배격과 혁신정치 실현, 생산 분배의 합리적 계획을 통한 민족자본 육성과 농민 노동자 등의 생활권 확보, 평화적 방식에 의한 조국 통일 실현, 교육체계의 국가보장제 수립 등이다.

1956년 창당대회 개회사에서 조봉암은 진보당의 과업으로 민주수호와 조국통일을 내걸었다. 그리고 “명실상부한 자유와 평등과 사람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줄 진정한 대중적 복지사회를 건설하



는데 있다”고 밝혔다.

이것만으로도 조봉암의 명예회복과 복원이 단순히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을, 그것도 한참 뒤늦게 바로잡는 것만으로 마무리될 수 없음을 가리킨다.

그가 극복하고자 했던 현실은 지양되었는가. 그가 가고자 했던 진보 정치의 길은 진전되었는가. 그가 꿈

꾸었던 평화와 복지의 사회는 이루어졌는가.

아버지가 참혹한 죽음을 당한 후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살아온 팔순의 딸은 대법원의 무죄 재심 판결이 난 다음 “이제 죽어서 아버지를 뵈 수 있을 것 같아 안심이다”라고 말해 우리를 부끄럽게 했다. 그리고 “그래도 세상이 조금 바뀐 것 같아 다행이다”라고, 그녀에게는 너무도 무력했을 지난 반세기를 정리했다.

평화통일과 복지사회를 주창하고, 그를 위한 정당을 만든 것 때문에 간첩죄로 사형당한 세상은 이제도 ‘조금’ 바뀌었을 뿐이다. 그가 죽은 지 반세기가 지나서도 평화와 민주가 흔들리고 부정당하고, 기본적 복지의 문제마저 편협한 색깔로 난도되는 세상이니 말이다.

조봉암은 1959년 7월31일 사형당하기 직전에 짧은 유언을 남겼다.

그가 뿌린 평화 씨앗 어디 있나

“결국엔 어느 때가 평화통일을 할 날이 올 것이고 바라고 바라던 밝은 정치와 온 국민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네. 씨를 부린 자가 거둔다고 생각하면 안되지. 나는 씨를 뿌려놓고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네.”

그가 죽음으로써까지 뿌린 ‘씨’는 어느 만큼 거두어지고 있는가. 52년이 지나서야 그의 죽음을 신원시킨 지금, 우리 사회가 묻고 대답해야 할 건 이것이다. 무참한 죽음의 사유를 기록할 수 없어 여태껏 공백으로 남겨둔 망우리 산마루 묘비 뒷면, 거기에 ‘평화통일과 온 국민이 잘사는 나라의 씨를 뿌리셨다’고 새길 수 있어야 진정한 조봉암의 시대적 복원이 완성된다. 



「신흥무관학교 설립 100주년과 윤기섭 선생」 학술회의 안내



2011년은 신흥무관학교 설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며, 신흥무관학교 교장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무원 및 군무장과 의정원 의장을 역임한 윤기섭 선생이 만주로 망명한지 100년 되는 해이다.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는 2011년 4월 5일 화요일, 「신흥무관학교 설립 100주년과 윤기섭 선생」 학술회의를 서울 역사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의미 있는 행사인 만큼 학생 및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1부 : 신흥무관학교 설립 100주년과 윤기섭 선생 망명 100주년 기념식

사회 김홍성(KBS 아나운서)

2부 : 학술회의 - 주제

사회 박민영(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위원)

주제 1. 「신흥무관학교와 윤기섭」	발 표	한시준(단국대 교수)
	토 론	박 환(수원대 교수)
주제 2.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윤기섭」	발 표	김광재(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토 론	김병기(한가람역사연구소 연구원)
주제 3. 「대한민국임시의정원과 윤기섭」	발 표	이재호(국가보훈처 연구관)
	토 론	김용달(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수석연구원)



교통편 :

지하철 _

5호선 광화문역 7번 출구(도보 10분)

버 스 -

(간선) 101 160 260 270 271 273 370 470 471 600

601 602 702A 702B 703 704 710 720 721

(지선) 7019

(광역) 2100 2300 2400 2500 9701 9701

(심야) 9709 9710



2011년 「독립정신」 첫 산행이 3월 시작됩니다.



2011년 「독립정신」 첫 산행이 3월26일 토요일, 봄을 맞이해 새롭게 시작된다. 2011년도 첫 산행지는 인왕산으로 산행 참가를 원하는 회원은 3월26일 오전 10시까지 사직공원으로 오면 된다. 올해 첫 산행인 만큼 많은 학생 및 일반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산행일자 : 2011년 3월 26일(토) 10시

산행지 : 인왕산

집합장소 : 사직공원 내(사직단)

준비물 : 간단한 도시락

문의처 :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사무처 02-3210-0411

교통편 : 지하철 3호선-경복궁역 1번 출구(도보로 5분)

버스(사직공원 하차) - (지선) 7025, (간선) 171, 601, 606, 706, 708

(광역) 9703, 9706, (마을버스) 종로 05

신흥무관학교 설립 100주년 기념 ‘한·일 역사 재조명’ 학술대회



새로운 한·일 관계의 모색'을 주제로 한·일 학술대회를 광복회,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사)백야 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한민족정신지도자연합회, B&B코리아, 이종걸 국회의원 등의 후원으로 개최했다.

광복의병연구소는 신흥무관학교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한·중·일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꿈꿨던 우당 이회영 선생의 평화정신을 살펴보고 그 정신 속에 흐르고 있는 단군의 '홍익사상'에 대해 조명함으로써 21세기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새로운 한·일관계의 해법을 제시한 뜻깊은 자리였다.

(사)국학원 산하 광복의병연구소가 지난 1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신흥무관학교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조봉암과 진보당



조봉암과 진보당
정태영 지음 | 후마니타스

한국 현대사에서 최초로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했던 조봉암과 진보당의 역사적 실험과 좌절에 대한 기록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1945년 이후 정치사에서 이승만의 자유당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한민당으로 대표되는 보수 야당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북한으로 대표되는 공산 세력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범혁신계가 어떤 생각과 비전을 발전시키고자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민주사회주의자로서의 조봉암과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서의 진보당의 성격을 당시의 사료와 경험을 통해 분석, 평가함으로써 여전히 역사의 과오로 남아 있는 조봉암과 진보당사건의 진실에 다가가는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1991년 한길사에서 출간되었던 동명 도서의 개정판. 이 책은 조봉암의 사상 형성과 변화를 당시 역사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있다. 3·1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던 일,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받아들인 사회주의, 해방 전의 조선공산당 활동과 해방 후 공산당과의 결별, 이어지는 해방 정국에서 조봉암의 중간노선이 합리적인 이유와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필요했던 중간노선 조직에 대해 충분히 서술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서들이 조명하지 않았던 점이다. 특히 친미·친소, 극좌·극우의 양극화를 달리는 해방 정국의 정황에서 민중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노선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조봉암의 사상은 변화하고 성숙해갔는데, 이는 조봉암의 노선을 '전향'이나 '변질'로만 보던 것과는 분명한 선을 그은 것으로, 해방 정국의 복잡한 상황에서 진정 한국 사회에 필요했던 현실 대안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㉞



정정화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안살림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안살림꾼
신명식 지음 | 역사공간

독립운동사 대중화를 위한 「한국의 독립운동가들」 시리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안살림꾼 정정화」. 이 시리즈는 100명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하여 그들의 삶과 자취를 조명하며, 이 책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안살림꾼 정정화를 만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통제를 활용하여 세 번이나 잠입을 감행하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당하기도 하는 등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도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에 옮긴 정정화의 삶을 통해 조국과 인간에 대한 진정한 헌신과 배려를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안살림을 맡은 정정화

일제하 많은 여성들은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가장의 결정에 따라 망명사회의 일원이 됐고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정정화는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에 옮겼다. 나아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통제를 활용해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했으며, 연통제가 폐쇄되자 야음을 이용하여 압록강을 건너 밀사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 차례나 국내 잠입을 감행하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당하기도 하였다. 목숨을 걸고 칠혹 같은 밤에 압록강을 쪽배로 건넌 것도 20대 초반의 정정화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다. 정정화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여 임시정부의 김구로부터 한국의 잔다르크라는 칭송을 받기도 했다.

정정화는 그녀의 삶을 통해 조국과 인간에 대한 진정한 헌신과 배려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조국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그것을 위해 죽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 그러면 조국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한 정정화의 말은 현재의 우리에게 많은 귀감이 된다.

-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011년 1월, 2월 회비납부자 명단 ◆

회원명	1월	2월	회원명	1월	2월	회원명	1월	2월
(사유정조동호선생기념사업회)	10,000		백영미		10,000	이화순	30,000	30,000
강만길	20,000		변병식	100,000	100,000	인순창	30,000	30,000
강재욱	20,000	20,000	서영훈	30,000	30,000	임삼조	10,000	10,000
공성진	30,000	30,000	서홍관	30,000	30,000	임재경	5,000	5,000
곽태원	50,000	50,000	성인제약(주)	100,000	100,000	임진택	5,000	5,000
권상윤		10,000	송만섭		100,000	장은기	20,000	20,000
권순갑	20,000	20,000	송재웅	30,000	30,000	장팔순		10,000
권영관	10,000	10,000	신명식	10,000	10,000	장 홍	20,000	20,000
길사원	10,000	10,000	신영연	10,000		전창일	20,000	20,000
김경애	10,000	10,000	신영한		10,000	정동익	30,000	30,000
김광림	30,000	30,000	신준수	20,000	20,000	정만기	30,000	30,000
김광재	5,000	5,000	심재권	30,000	30,000	정범구	30,000	30,000
김동현	10,000	20,000	안영찬	5,000	5,000	정재경		10,000
김보성	10,000	10,000	양인선	10,000	10,000	정철승	30,000	30,000
김선군	10,000	10,000	양진호	10,000	210,000	정환기	10,000	10,000
김성곤	20,000		엄기남	50,000	50,000	조기식		20,000
김숙정	50,000	50,000	염승훈	10,000	10,000	조명숙	10,000	10,000
김연실	10,000	10,000	오승숙	10,000	10,000	조세영	20,000	20,000
김영림	30,000	30,000	오영은	30,000	30,000	조영빈	5,000	
김용덕	10,000	10,000	오은주	20,000	20,000	조용준	30,000	30,000
김원규	10,000	10,000	오정수	20,000	20,000	조용환	30,000	30,000
김원유	50,000	50,000	오화수	20,000	20,000	조인형	10,000	10,000
김 위	20,000	20,000	우상호	30,000	30,000	조정훈	30,000	30,000
김자동	100,000	100,000	유기수	10,000	10,000	조회환	10,000	10,000
김우석	200,000	100,000	유원목	10,000	10,000	주세영	30,000	30,000
김재홍	10,000	10,000	윤여천	10,000		주철기	30,000	30,000
김정욱	50,000	50,000	윤영소	10,000	10,000	차창석		10,000
김종배	20,000	20,000	윤지현	10,000		천정배	10,000	10,000
김중숙	10,000	10,000	윤한옥	10,000	10,000	최낙현		20,000
김진경		10,000	이규중	30,000	30,000	최문순	10,000	10,000
김진모	20,000	20,000	이규호	30,000	30,000	최병욱		10,000
김진영	20,000	10,000	이두엽	20,000	20,000	최영진	10,000	10,000
김진현	50,000	50,000	이두희	30,000	30,000	최정식	10,000	10,000
김판수	5,000	5,000	이병규	10,000		하수정	10,000	
김학근	10,000	10,000	이상준	200,000	200,000	함세웅	30,000	30,000
김호진	10,000	10,000	이상훈		10,000	홍순권	10,000	10,000
김희선	10,000	10,000	이상배	10,000	10,000	황용만	5,000	5,000
남만우	30,000	30,000	이영국	10,000	10,000			
노시선	30,000	30,000	이영후	30,000	30,000			
노영택		20,000	이용규	10,000	10,000			
류동연	5,000	5,000	이우재	10,000	10,000			
류시경	30,000	30,000	이원혁	100,000	100,000			
민향선		10,000	이응국	5,000	5,000			
박경국	10,000	10,000	이일선	30,000	30,000			
박녹삼	10,000	10,000	이재선	5,000	5,000			
박두곤	10,000		이정재	50,000	50,000			
박아영	10,000	10,000	이종건	10,000				
박원표	50,000	10,000	이종락	30,000	30,000			
박은봉	30,000	30,000	이종찬	100,000	100,000			
박익란	60,000	30,000	이창복	20,000	20,000			
박인석	10,000	10,000	이창중	20,000	20,000			
박정근	30,000	30,000	이항중	30,000	30,000			
박종기	10,000		이해준	20,000	20,000			
박형순	10,000	10,000	이혜수		10,000			
백낙청	10,000	10,000	이호현	40,000	20,000			

2011년 1월, 2월 특별회비

회원명	11월	12월
(주)오도 오디오	6,000,000	6,000,000
(주)이팩철강	2,000,000	2,000,000
이승호		350,000
김준현		5,000,000
송만섭		100,000

2011년 1월, 2월 기념관회비

회원명	1월	2월
차영조	10,000	10,000
최기창		10,000
유종하	10,000	10,000

◆ 입회원서 ◆

이름 (한자)		연락처	핸드폰
			자택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주소			
직업		소속	
비고			

본인은 (사)대한민국의민정부기념사업회 설립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다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입회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 CMS자동납입 신청서 ◆

은행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	1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출금시작월	()월
납부금액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4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input type="checkbox"/> 20만원 <input type="checkbox"/>		
	자유지정금액 <input type="checkbox"/> (원)		

- * 납부하신 회비는 지정 기부금 영수증을 1월에 발행하며 연말정산에 경상비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후 FAX(02-732-2870)으로 송부 바랍니다.